

## 보건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중점



김문식  
보건복지부 보건국장

지난해는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그런 중에서도 보건사업분야의 획을 그은 역사적 의미가 부여된 해라 할 수 있다.

첫째,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시행이다.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에 관한 기본법이라 하겠다.

둘째,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규정된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어 국민 정신건강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셋째, 그동안 소외되었다 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의과학기술개발에의 투자라 할

수 있다.

'95년에는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한국의 레지오넬라증의 혈청역학, PCR 검출 및 분자역학에 관한 연구』 등 68개 과제가 선정되어 1차년도 연구가 종료되었고 '96년도 예산으로 100억원이 추가 확보되었으므로 의과학분야는 물론 보건산업분야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위에 금년에는 보건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갈 계획이다.

기본시책 방향으로 건강실천운동의 저변확대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반을 확충하고, 전염병관리의 전문화와 예방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전산망 구축, 정신보건사업 관리개선과 암·성인병등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치료 사업을 강

화하고 마지막으로 인구의 질향상을 위한 새로운 인구정책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 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반확충

대부분의 질병이 개인의 잘못된 행동·습관 등에서 비롯되므로

○ 조기금연교육을 통한 흡연에의 접근을 차단, 금연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전 공중이 이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지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19세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담배판매금지를 철저히 이행하여 금연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금연운동을 정착화하고

○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경고문구 표기이행을 촉구하며, 여성단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을 유도하는 절주운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건강증진 실천운동의 저변을 확대하며

○ 바른 식생활 교육, 구강건강, 간흡충 다발지역 주민에 대한 생식방지 등의 홍보교육사업에 주력할 것이다.

## 2. 건강증진을 위한 체계구축

담배사업자의 출연금과 의료보험자의 부담금 등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하여 보건교육자료개발, 조사·연구사업,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3.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체계강화

전반적인 급성전염병 발생수는 감소하였으나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양질의 보건 의료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였으며, 소규모 유행도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더 커졌다. 따라서 급성전염병의 유행을 조기에 발견 또는 사전 예측하기 위해서 전산정보체계를 도입하고, 주요 질병의 유행예측 사업을 전문화하며 전염병관리 대처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전산정보체계는 전염병 발생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배포하기 위한 것으로 초고속통신망구축기획사업단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현재 보건복지부-국립서울검역소-경기도(도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96년 7월부터 개발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시범운용을 실시하고,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다.

유행예측 사업은 현재 일본뇌염, 비브리오패혈증, 레지오넬라, 인플루엔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인천, 경기, 강원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유행예측 사업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유행예측 사업을 전문화하기 위해서 개발 중인 전산정보체계를 활용해서 과거 자료와 현재 상황을 비교해서 조기예측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전염병관리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초에 『감염병실험실진단지침』을 제작·보급하였으며, 『법정전염병신고기준』

과 질병별 관리방법을 담은 소책자를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 4. 해외유입 전염병 관리 강화

최근 인적 교류의 증가로 아국인이 해외 여행 도중 전염병에 걸려서 입국하거나, 해외에서 유행하는 전염병이 국내로 유입되어 재유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해외 풍토병의 경우 국민들이 예방방법을 잘 모르거나, 예방약품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지역별, 주요 전염병별로 오염지역 현황, 유행양상, 예방방법 등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책자, 전단, 포스터 등 다양한 홍보 자료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전산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김포공항 대합실 등에 무인안내시스템을 설치하고 PC통신망으로도 전달할 계획이다.

#### 5. 안전하고 과학적인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전염병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안전수칙을 지켜서 꼭 필요한 대상에게 적기에 접종되어야 한다. 또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부작용에 대하여 의료인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상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95년부터 『예방접종피해국가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실행지침』과 『예방접종부작용발생보고서』를 개발하여 보급한 바 있다. 금년에는

『예방접종실행지침』이 지켜지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예방접종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과학적인 접종 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결핵예방을 위한 BCG接种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에 대한 재접종 기준을 투베르클린 반응검사 9mm 이하에서 5mm 이하로 개선하여 접종대상을 10만명 정도 줄일 예정이다.

#### 6. 에이즈·성병관리사업 강화

국내 HIV감염은 80~90%가 성접촉을 통한 것으로 그 예방을 위해서는 건전한 성행위의 확산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 TV 자막광고, 전광판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개발해서 보급할 예정이다. 감염우려자와 감염자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서 에이즈관리요원의 상담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의 도움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직도 일부에서 헌혈을 HIV감염 확인의 방편으로 오용하는 사례가 남아 있는바, 헌혈액에 대한 AIDS검사는 강화하되 검사 결과 통보서에 AIDS검사 결과란은 삭제할 방침이다.

또한,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 의한 건강진단의 검사대상과 검사항목을 재조정하고 성병관리기관을 재정비하여 AIDS 상담기능을 추가하는 성병관리사업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질병이  
개인의  
잘못된 행동·습관  
등에서 비롯되므로  
조기 금연교육,  
절주운동 전개  
등을 통한  
건강증진 실천운동의  
저변 확대에  
주력할 것이다.

## 7. 결핵 및 나병관리

아직도 높은 유병률과 사망순위 9위를 차지하고 있는 결핵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재 50인용으로 생산하고 있는 BCG를 5~10인용으로 생산하고 BCG와 PPD 생산시설을 조속히 준공하여 결핵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나환자 치료종결자의 퇴록 유도도 사회복귀를 추진시켜 조기에 정착하도록 하고 나장애양로자 생활보호 및 수용보호의 내실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현대화, 나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지원을 현재 20개소에서 39개소로 확대 지원할 것이며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무의무탁 나환자 보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97년까지 취약 나정착촌 환자 750세대에 대해 150만원씩을 지원하며 추가로 정착촌의 신규 공동사업비도 지원토록 하여 자립을 위한 공동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8. 정신질환관리

최근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적 긴장의 고조 등으로 정신질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정신질환자수는 전국민의 2.16%인 97만명으로 이중 입원치료를 요하는 환자도 11만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를 위해서는 3만 5천병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확보된 병상은 2만여병상에 불과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부족병상 해소를 위해 충남과 경기도 국립정신병원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시·도에 공립정신병원 건립에 대한 국고지원을 통하여 전문병상 확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적극 추진해온 정신보건법이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수준 향상과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상담 및 예방과 사회복귀 등을 위한 지역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몇가지 요약하면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과 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둘째, 지역내 정신의료기관을 활용하여 보건소와 함께 지역내의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역사회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셋째,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각각의 요건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여 입원에 대한 환자의 부담여부와 인권유린 소지를 예방하고 중앙과 각 시·도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환자의 퇴원이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은 이 법 시행후 7년 이내에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토록 하여 환자의 증상에 따른 효과적인 의료와 재활을 제공토록 하였다.

따라서 금년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의 제정과 아직 인권문제가 잔존하는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안을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다.

## 9. 암·성인병 및 특수질환관리

최근 우리나라의 질병발생 양상을 보면 경제발전으로 인한 생활환경과 위생수준

의 개선 및 치료방법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전염성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현격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에 인구의 노령화, 식생활 양식의 변화 등으로 암·고혈압·당뇨병 등 만성퇴행성 질환(성인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질병관리는 소극적 사후치료에서 적극적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위주로 전개하여 나아가갈 계획이며 전염병관리 자원을 점차적으로 만성퇴행성 질환(성인병) 관리사업에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염병관리 체계에서 질병에 대한 종합관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첫째, 질병의 예방과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홍보·교육과 아울러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금연·절주운동의 정착 및 국민영양 개선을 위한 자료개발과 아울러 고혈압·당뇨병등 성인병 관리를 위한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둘째, 암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40~60세 미만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하여 암 검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암 관리를 위한 장·단기 종합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사람의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주요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암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건립중에 있으며, 암 정복을 위한 장기 종합계획으로 “암정복 10개년계획” 수립

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백혈병 등 난치병 환자를 위한 골수기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증자 등록관리 및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혈우병 환자에 대한 치료 의약품비의 지원 등 특수질환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 10. 인구정책의 개선추진

1962년부터 시작된 가족계획사업에 따라 1980년대 중반이후 인구증가율 1% 미만, 대체출산력(합계출산율 2.1)이하의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성공적이라고는 하나 피임실패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의 성행, 남녀성비 불균형, 청소년 성문제, 노인 인구 증가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출산억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인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을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학계, 여성계, 연구기관 및 관계부처 관계자들로 “인구정책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새로운 인구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임신부·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의 적시 실시 등에 역점을 두어 모자보건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정신지체아발생 예방을 위한

**앞으로의 질병관리는  
소극적 사후치료에서  
적극적 건강검진 및  
예방사업 위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점차적으로  
성인병 관리사업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전 신생아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11. 공중위생 수준향상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및 미용업 등 위생직업자의 영업활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한편, 신규영업자에 대한 사전 위생교육 실시,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정화청소(다트청소) 의무화, 위생처리업(물수건)의 자동세탁 의무화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면서 공중위생감시원과 민간단체의 자율지도원으로 하여금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㉞